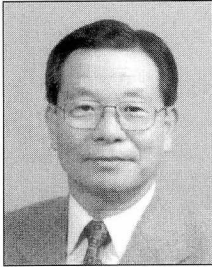


기업의 Y2K 문제 해결 방안



손 완 수

한국 Y2K 인콰먼트 이사장, 경영학 박사

Y2K 문제는 이제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난에 준하는 범국가적인 문제이다. 새 천년을 불과 190일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정부와 일부 기업이 Y2K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신문지상에는 국내외 Y2K 관련기사가 실리고, TV방송국들은 앞다투어 Y2K 특집을 만들어 방영하고, 호텔마다 Y2K 관련 세미나와 설명회들로 붐비고 있다.

그러나 정작 Y2K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대응하여야 할 기업의 현장에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갖고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부 대기업들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 1~2년간에 걸쳐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들여서 Y2K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Y2K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다하더라도 비용과 인력의 한계상 손을 놓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도 있듯이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늦지는 않다. 이제부터 Y2K 문제를 정확히 인식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류의 대재앙으로까지 불리는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Y2K 문제)란 과연 무엇인가?

문제의 발단은 컴퓨터의 연도표기 방법이 4자리 대신에 2자리로 되어있어 서기 2000년에는 '00'으로 표시되고, 두 자리 연도표시 앞에는 '19'가 입력되어 1900년으로 인식됨으로써 결국 날짜를 기준으로 한 정렬, 연산, 비교 등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컴퓨터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내장된 타이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타이머 기능은 자동화기기의 "주행 기록계"와 역할상 유사한 특성이 있다.

그런데 주행 기록계가 작동을 하다가 일정 숫자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모든 숫자가 처음의 제자리 즉, 제로(0)가 되는 것과 같이 일부 컴퓨터시스템은 2000년이 되는 시점에 컴퓨터시스템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타이머가 한계에 이르게 되어 1900년을 가리키게 되거나 컴퓨터시스템 자체의 시계기능을 이용하는 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윤년문제이다. 서기 2000년은 계산상으로는 윤년이 아니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해로서 윤년과 세기의 전환이 함께 오는 연도이므로 일부 소프트웨어들이 2000년 2월 29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의 인식오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전산기,

주변기기, 업무 프로그램 및 날짜 변수로 작동되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자동화기기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으로써 기업활동 및 국정업무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Y2K문제 해결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Y2K문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며 2000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시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 준비기간이 불과 200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Y2K문제는 99% 대비로도 안심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1% 또는 0.1%의 오류로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Test를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단위 기업이나 시설의 Y2K문제 해결만으로 Y2K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계열사, 협력업체 및 Supply Chain인 원자재 또는 부품 납품업체, 대리점 등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모든 업체가 다함께 Y2K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제 거래에 있어서 Y2K문제 해결이 필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거래에서 Supply Chain의 관계에 있는 업체는 Y2K문제 해결을 꼭 이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서신을 받고 있는 업체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Y2K문제 해결의 주안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Y2K문제는 특정영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산업별로 공동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비용이 증가하고 성공률이 떨어지므로 Y2K문제 해결을 조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Zero Defect에 이르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검증 Test를 하여야 하고, Internal Test 뿐 아니라 관련회사, 협력사, 거래선 등의 Cooperative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비상계획 수립과 응급조치를 꼭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체 Y2K문제 대응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최종 검증으로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Y2K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UN의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인증을 받음으로써 Y2K 대응에 대한 주주나 고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내 기관 및 기업간 공신력 제고, 대외 경쟁력 강화나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Y2K문제를 영리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인증기관을 졸속으로 설립하고 부실인증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Y2K 인증을 받고자 할 때는 인증비용보다는 인증기관의 설립근거, 설립목적, 인증시스템, 인증실적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선택하여야 부실인증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Y2K문제는 그 대응 여부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IMF 위기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Y2K문제 대응은 범국가적으로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Y2K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천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